무면허 · 음주에 도로 위 방치 전동킥보드 위험한 운행 여전

개인형 이동장치(PM) 의무 강화 1년…광주 도심 둘러봤더니

2인 이상 탑승·중앙선 침범 아찔
광주 1년여간 위반 8298건 적발
운전자 사망 등 교통사고 매년 증가
사업자측 안전모 제공 의무화하고
사고 예방 위해 단속 강화 필요

지난 3일 오후 8시 20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롯데마트맥스 앞 도로.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친구들과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이 남성은 안전모(헬멧)도 쓰지 않고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왕복 6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아무렇지 않게 건넜다. 같은 날 오전 무등산 지산유원지 인근 내리막길에선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고 귀에는 이어폰을 낀 상태였다. 인도와 도로를 오가며 질주하는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운전자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 1년을 넘었지만,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주행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등 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해 5월 13일 시행됐지만, 광주 도심은 물론 한적한 무등산 주변 도로에까지 아찔한 운행이 속속 목격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여간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8298건이라고 밝혔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사례가 69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 운전은 457건이다.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184건이나 된다. 이 외에도 중앙선 침범·신호위반·인도 주행·2인 이상 탑승 등으로 적발된 건수도 683건에 이른다.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세다.

광주에서는 2019년 18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 38건, 2021년 100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2건 발생했다. 2020년 4월에는 광산구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전남에서는 PM 관련 교통사고가 2019년 8건에서 2020년 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47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났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한후 도로나 인도에 마구잡이로 방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언제든지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다.

법규를 위반한 전동킥보드의 도심 질주가 이어지는 것은 우선 20~30세대들에게 이른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만 5개 사업자가 4300대가 넘는 전동킥보드를 경쟁적으로 비치한 탓에 접근이 쉽다. 또한, 몇천원만 결제하면 목적지를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이, 운전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간섭없이 내달릴 수 있다는 점도 인기 비결이다. 바람이 매섭지 않은 봄과 여름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추세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은 우선 경찰 단속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백승권 광주시교통문화연수원 부장은 "법령은 개정됐지만, 선진국처럼 자전거·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의 전문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면 교통·생활·안전분야에 치중하는 자치 경찰이 이 부분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 측이 안전모 제공 의무화 등 이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된 조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동킥보드가 광주에만 4000대 이상 깔렸지만, 안전모가 함께 비치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이용자에게만 위험과 불편을 떠넘기지 말고 안전모 상시 배치 등 사업자 측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자동차 대여업과 달리 인허가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방법이 많지 않다"며 "대여업체에 안전모 제공을 권고해 업체 측이 안전모를 수시로 비치하고 있지만, 분실 사례가 많아 마냥 업체만 몰아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PM 운전은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가능하고, 각종 의무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 원, 과로·약물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 적발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한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쌍촌동 이면도로에서 젊은 남녀가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같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주행하고 있다.

총장 후보 거론됐던 박찬호 광주지검장 사의

공석 중인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박찬호(56·사법연수원 26기·사진) 광주지검장이 7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글을 올리고 "검찰이 어려운 때 사직하게 돼 죄송하다.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 고위직의 한 사람으로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 있다"며 "보통 사람인 저로서 진퇴 결정이 쉽지 않았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썼다.

이어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축소 법안 처리 등을 두고는 "검수완박 상황에 이르러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며 "최근 일방적으로 진행된 형사사법 제도 변경은 재고돼야 한다"고 했다.

박 지검장은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와 전남대(철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검사로 임관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검사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대검 중수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2017년 중앙지검 2차장을 맡아 선거·노동 범죄를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2019년에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해 참모로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이어 대검 공안부장, 제주지검장을 거쳐 2021년 6월 광주지검장에 보임됐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잇따라 검찰 출신 측근을 기용하는 점을 들어, 사직서를 낸 박 지검장이 공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화물연대 총파업 행진 7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앞 도로에서 화물연대 광주지부 조합원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조합 사무실이 있는 진곡산단 화물차고지까지 행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목 디스크 수술 사망' 부검 1차 소견은 '원인 미상'

척추 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다 사망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부검이 이뤄졌으나, 부검의 1차 구두 소견은 '원인 미상'에 그쳤다.

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는 이날 오전 9시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 1차 구두 소견으로 '미상' 결과를 내놨다.

국과수가 A씨에게서 특별한 외상이나 사인으로 특정할 증상, 질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 2차 소견이 나오기까지는 2~4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추후 종합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의료사고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숨진 A씨는 지난 2일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졌다. 환자가 숨진 병원은 간호조무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대리수술'로 대표원장 등 의사 3명과 40~50대 남성 간호조무사 3명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곳이다. 유족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유연재 기자 yjyou@

화정아이파크 안전대책 요구 상인 6명 업무 방해 혐의 송치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작업에 앞서 '안전 대책'을 요구하던 인근 상인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서부경찰은 피해상가대책위원회 회원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 진출입로를 1t트럭과 승용차 등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책위는 사고 동인 201동 잔해물 해체 작업에 앞서 주변 상가와 행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개월 넘게 현대산업개발과 광주시 서구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최후 수단으로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았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1일 현장 진출입로가 막혀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자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상인 7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중 CCTV 등을 통해 진출입로를 막아선 정황이 확인된 6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방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데다, 혐의가 증거 자료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돼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석선 피해상가대책위 위원장은 "4년 넘게 비산먼지와 소음, 매출 감소로 온갖 피해를 받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상인들에게 돌려준 건 고소장뿐이다"며 "현대산업개발이 협상 대신 으름장만 놓는 이상 상인들도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21타경 6486	1	광산구 수등로258번길13, 102동 5층 501호 [신가동,신가지구도시공사아파트]59.81㎡	아파트	170,000,000 170,000,000	
2022타경 829	1	서구 운천로56번길19, 101동 3층 305호 [금호동,금호동삼능공간아파트] 84.92㎡	아파트	256,000,000 256,000,000	
2022타경 60555	1	북구 우치로345, 7층 703호 [삼각동,드림네스트2차] 84.7195㎡	아파트	274,000,000 274,000,000	현황조사시점기준 관리비약120만원 미납된상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21타경 78733	1	장성군 남면 월정리 883 241㎡	대	22,309,540 22,309,54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일괄매각.제시외건물매각제외
		장성군 남면 불정길 13-8 단층 89.6㎡ 부속건물 단층창고및부속사 20.1㎡[물건번호1:심요섭2/13지분전부.공부상단층창고및부속사20.1㎡멸실됨]	단독주택		
2021타경 78931	1	광산구 수완로73번길 24-44 지하1층18.59㎡ 1층133.54㎡ 2층123.13㎡	단독주택	609,609,000 609,609,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일괄매각.수목포함매각
		광산구 수완동 1012 375㎡[물건번호1:진병길1/2지분전부]	대		
[대지/임야/전답]					
2021타경 7380	1	장성군 남면 삼태리 432-2 4463㎡[이정숙,이하영,이덕각1/24지분전부.정확한경계측량요.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3지구개발예정지임]	답	134,619,080 134,619,08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북동측일부지상소재한농막매각제외
2021타경 8369	8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산102-1 297521㎡	임야	368,569,200 368,569,200	일괄매각.분묘소재여부확인할수없음
		동소 산113 9620㎡[물건번호8:지적경계불명확하므로정확한경계측량요.맹지]	임야		
	9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산102-2 78669㎡[지적경계불명확하므로정확한경계측량요]	임야	472,014,000 472,014,000	분묘소재여부확인할수없음.맹지
2021타경 77822	1	영광군 낙월면 신기리 559-2 902.3㎡	답	7,037,940 7,037,94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77822	2	영광군 낙월면 신기리 561-3 1906.9㎡	답	14,873,820 14,873,82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1타경 78221	1	서구 용두동 279-1 401㎡[갑구2번김가옥,갑구8번김가옥각1/4지분전부.현황'전'으로 이용중]	대	98,445,500 98,445,5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21타경 78733	2	장성군 남면 월정리 511-6 636㎡	답	49,901,830 49,901,830	지분매각.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
		동소 511-7 1840㎡[물건번호2:심요섭2/13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2022타경 60081	1	영광군 법성면 월산리 963-2 2712㎡	답	12,307,200 12,307,20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1회로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963-3 968㎡	답		
		동소 963-1 2730㎡[물건번호1:양해성4/25지분전부.소하천구역및소하천예정지에일부저촉됨]	답		
2022타경 60296	1	곡성군 목사동면 수곡리 15 3048㎡	답	8,429,900 8,429,900	일괄매각.정확한위치및경계측량요
		동소 14 225㎡	답		
		동소 16 569㎡[물건번호1:현황상자연림과유사한'묵답'이며,맹지]	답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21타경 76386	1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157, 상가동 3층 304호 [부영2차아파트] 61.2㎡	생활편익시설	96,600,000 96,600,000	
[자동차,중기]					
2022타경 60227	1	사용본거지:북구 우치로 187-17, 103호[오치동] 등록번호:33버4608 차명:K3 연식:2017[뒤범퍼일부스크래치있는상태]	자동차	12,000,000 12,000,000	보관:광주서구백진동537-1,하나로에프앤씨[011-372-2362]
2022타경 63004	1	사용본거지:광산구 목련로 87 [월곡동] 등록번호:396노1811 차명:제규어 XE 2.0T 연식:2016	자동차	17,000,000 17,000,000	보관:광주남구송암로124-3,송원주차장[010-3622-7261]
[기타]					
2021타경 8369	4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360 4862㎡	대	508,822,720 508,822,720	일괄매각.지적경계불명확하므로정확한경계측량요
		담양군 월산면 가곡길 39 단층245.52㎡ 부속건물 단층 1,2층각61.56㎡ 단층변소 25.92㎡[물건번호4:목록29건물샷시유리창일부파손되었고공실상태.급배수,위생설비등이되었으나정상사용여부불투명함]	노인당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2. 6. 22.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2. 6. 29.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말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2. 6. 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길호